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

전 세계적으로 사회정책은 빠르게 진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개별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구형, 앵글로색슨형, 대륙형, 그리고 지중해 국가형 등 유럽의 사회정책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발전해 왔다. 각기 다른 배경에서 발전되어왔지만 현재 유럽사회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향후 발전모델에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특히 사회보장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잔여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각종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해왔다. 기초보장제도과 사회보험에 이어서 저출산·고령

화사회에 대응한 각종 보육관련 정책, 장기요양제도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등으로 제도의 내용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유럽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측면에서 기존 제도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핵심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만큼, 본 고에서는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체계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달의 초점으로 12월호에서는 기초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1월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2월

과 1월에 초점으로 게재되는 논문들만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끝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새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의 시작'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후속으로 다양한 양질의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박경**